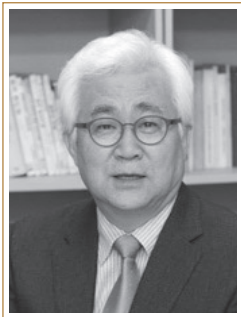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하여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한국정책학회 회장
한국행정개혁신민연합 공동대표(현)

“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적인 정책의 완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공론화관 궁극적으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우 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35%를 충당할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핵연료는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원자력발전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임시 저장고에 보관된다.

1978년 고리발전소의 상업 운전으로부터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일부 발전소의 경우 2016년부터 임시 저장이 불가능해질 것이며 저장 방식의 개선이나 저장 장소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도 2024년경에는 일부 발전소의 발전 중단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을 일부에서는 국민 압박용이라고 비난하지만 사실이 사실인 만큼 말 그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정부의 분명한 입장 제시와 지역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

앞으로 2024년까지는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최종 처분 이전 관리 방법의 한 유형인 중간 저장 시설 건설에도 통상 6~7년 이상 걸리니 최소한 5년 후인 2017년까지는 논의가 종료되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 방사능이 약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도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에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절차적 투명성, 정당성, 그리고 국민 참여의 중요성은 과거 우리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지 확보 과정에서 값비싼



앞으로 진행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은 약 20여명의 전체위원회와 다수의 실무위원회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참여자 자격 및 선정 방안 또한 논의되어야 한다. 참여자의 결정에는 다양성, 전문성, 대표성, 중립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전체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산업계, 지역, 정부 등의 추천을 바탕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선정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전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얻은 소중한 교훈이다.

돌이켜 보건대, 1980년대에 시작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 사업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철저히 정부 주도로 시행되었다. 의도적이지는 않았다고 보지만 국민이나 지역 주민은 사업의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그들의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었다. 그 결과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 주민과 시민 사회 단체, 그리고 적지 않은 전문가 집단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는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로 안면도 사태와 부안 사태를 들 수 있다. 형제간, 친지간, 이웃간, 지역간에 극복할 수 없었던 갈등은 폐기물처분장의 입지가 결정된 지 수 년이 흘러 이제 곧 공사의 완료가 예상되는 지금도 그 후유증의 치유에 적지 않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분명한 입장 제시와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4개 지역이 그 과정에 참여했고 경주 지역이 최종 부지로 결정되었다. 처분장의 건설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최초의 기대와 약속에 차질이 발생하여 실망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와 비교해 보면 큰 걸음의 진전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방식 제안

앞으로 진행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은 약 20여명의 전체위원회와 다수의 실무위원회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는 전

체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참여자 자격 및 선정 방안 또한 논의되어야 한다. 참여자의 결정에는 다양성, 전문성, 대표성, 중립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전체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산업계, 지역, 정부 등의 추천을 바탕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선정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전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공론화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식 또한 위원회의 출발과 동시에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전원 합의제 혹은 동의제를 기초로 하되 경합 의견에 대해선 위원회의 사전 결정에 따라 표결 혹은 소수 의견의 개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별도의 의사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공론화 추진 일정, 특히 공론화 종료 시점에 대한 일정과 공론화 추진 방식은 전체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 시민 단체, 원전 지역 주민,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들의 의견이 가감 없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적인 정책의 완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공론화란 궁극적으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